

사회문제와 국민성, 그리고 개혁을 위한 제안들

홍 숙 기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우리의 사회문제들은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개인의 행동에 집중해 온 심리학자들도 이제 사회문제들과 그 해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각되는 문제들은 환경, 정치, 교육문제들이다. '국민성' 때문에 사회문제들이 생긴다고 흔히 생각되는 바, 한국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들이 개관되었다. 많은 한국적 특성들은 집단주의 개념아래에 포괄될 수 있다. 우리의 집단주의의 문제는 그 폐쇄성과 배타성에 있으므로, 사회문제들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집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체감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현실 개혁의 방안들로서 차재호 (1994b)의 「문화설계의 심리학」과 전득주 외 (1992)의 「현대민주시민 교육론」을 논의하였다. 차재호는 의식개혁을 작동적 조건형성 원리에 따라 국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문제로 보고 그 전략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의 방안은 그러한 사회실험의 성공을 위한 '예비조치' -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용의, 즉 '의식개혁' - 에서 벽에 부딪힌다. 정부가 특히 부패와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민주화된 정부를 전제하는 바, 이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의 원리와 방법 (전득주 외, 1992)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저자들도 교육이 성공하려면 사회지도층과 교육자를 민주시민으로 교육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정부와 교육전문가가 국민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이 지도층을 이끌어 가야 하는 현실에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민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은 비판, 감시를 통하여 지도층 행동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시민들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비판, 반성하는 계몽을 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그러한 시민운동의 한 예로서 환경운동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환경운동은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시민에게 안녕감과 통제감을 주고, 환경은 너나 없이 우리 모두의 환경이며 그것의 개선 또한 공동의 노력으로만 가능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동체감을 키워준다. 그러한 안녕감과 공동체감은 우리의 집단주의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추석에 보도된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충격적으로 드러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커다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안되곤 하는 해결책들의 성격 또한 분명히 보여주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대형사건'들은 어느 언론매체, 어느 사회과학 연구나 분석보다도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들을 마치 공중 높은 곳

에서 몇 천 킬로와트의 서치라이트로 비추듯 조명해 준다.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에는 언제나 원인분석과 해결책 제안이 보도되는데, 주로 도덕성, 인간성, 사회/羣 기강, 도덕성/인간성 회복운동, 의식 개혁 운동 등이 거론된다.

우리의 사회문제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할 만큼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한국 심리학회는 1994년 5월에 「일상화된 국민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었고, 10월 정기 학회에서 「의식개혁: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집중해 온 심리학이 대중과 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의식개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들이라 하겠다.

사회문제 (social issue)란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 (차재호 1994a, p.3)이며, 사회문제 연구는 “사회가 안고 있는 또는 사회가 드러내는 문제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 (p.8)로서, 그 지향이 사회개혁적이고 사회참여적이다. 차재호는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가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면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일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문제는 통상 의식의 문제로 귀착되며, 따라서 제안되는 해결책들도 의식개혁을 지향한다. 그러나 과학적 심리학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행동의 문제로서 제시하고 또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접근방식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사회문제들을 심리학적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진단하고 그 해결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의 사회문제, 국민성을 고찰하면서 현실을 진단해보고, 현실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두 가지의 설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의 사회문제들

‘지존파 연쇄 살인 사건’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의 하나였다. 대부분 원래 평범하고 착했다고 하는 십여 명의 20대 청년들이 ‘있는 자’들을 죽이려는 범죄조직을 만들어 몇 명의 남녀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이다.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는 “세상은 빈부차이가 너무 크게 나 있고 돈 없는 사람에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한겨레

신문」 1994년 9월 24일자에서 인용한 한 범인의 말)는 데서 비롯되었다.¹⁾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불평등이 존재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엄청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남에게 과시하며 쓰는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우리 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후진적, 원시적인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상품으로 팔리고 있고, 경찰의 수사가 말할 수 없이 원시적이며, 돈만 있으면 첨단기의 대량 살상 무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평소에는 가려져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이 기회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로 지각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한덕웅 (1994)은 서울, 중부, 영남, 호남, 강원 지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 (N=1812)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1993년 11월 실시). 그는 응답자들에게 336개의 사회문제 목록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가려내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60% 이상이 지적한 문제들을 중요한 순서로 나열해 보면, 환경오염, 정치인의 부정부패, 교통체증/교통난/낮은 도로율, 수질오염, 산업폐기물/공장 폐수 처리, 입시위주의 교육 등이었다. 이 6개 문제에 이미 환경관련 항목이 3개 있듯이,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각되었다. 반응비율과 항목수를 둘 다 고려할 때 두번째로 중요한 영역은 교육의 문제였다.

차재호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부패구조와 관계 없는 문제와 부패구조에 지배되는 문제로 분류하였다 (1994b, pp.212-213). 부패구조란 “자신이 사는 사회나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일정한 태도나 행동을 보일 때 생기는 구조”인 “행동적 구조”의 하나이다 (차재호, 1993, p.19). 예컨대,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때, 교사에게 촌지를 주어

1) “지존파 조직원들의 특징은 먼저 한결같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20대 초반이란 점이었다. 또 하나 이들은 뚜렷이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다거나 겉으로 드러난 ‘폭력배’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범죄전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사회구성인이었다. 그렇다면 이들과 유사한 가정·생활환경 속에서 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름을 달리한 ‘무순 파’로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다”(김종석, 1994, p.50)

도 자녀에게 별 이득이 없지만 안주면 피해를 예상하게 되므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촌지를 주게 된다(차재호, 1993, pp.69-70). 결국 대다수가 촌지를 주므로 결과적으로 대다수가 촌지를 주게 되는 순환성이 생기며, 개인들은 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행동으로 그 구조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다.

큰 사회문제가 노출될 때 사회과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같은 사회·경제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하곤 하지만, 차재호는 사회·경제 구조라는 것도 결국 행동의 문제로 환원된다고 본다(1994a, p.20). 어떤 특정 집단 혹은 추상적인 사회·경제구조가 개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행동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정치·사회·경제구조나 제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비심리학적 요인'에 관심을 둔다 해도 심리학은 역시 일차적으로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행동의 과학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독자적인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는 거시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시각도 필요한 것이다.

부패구조와의 관련 여부로 사회문제들을 분류한다면, 환경과 교통은 그 구조와 관계없는 문제로, 정치부패와 교육은 그 구조에 지배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문제가 '남들이 법과 질서를 안 지키므로 나도 법과 질서를 안 지키다'는 구조를 상당 부분 내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의 부패/부조리가 나온다(김혜숙, 1994). 정치인이 무능하기 때문에 혹은 부패했기 때문에 환경문제고 교통문제고 생기며 해결도 안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행동의 구조'라는 면에서도 그렇다. 이종한(1994)이 「동아일보」(1990.6.11)에 보도된 "한국인의 법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82.4%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계층으로는 61.8%가 정치인들, 15.6%가 기업가들, 그리고 11.1%가 공무원들 지

목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도 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지도층의) 행동에서 비롯되며, 국민의식이 국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치부패의 문제는 음성적, 비공개적 정치자금 조달, 비민주적 정당운영, 비합리적 행정구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선거과정에서의 극심한 부패와 부정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김혜숙, 1994). 후보자들이 인식하는 선거의 문제들로는 금품, 선심 공세가 가장 크고(39.7%), 관권개입(22.1%), 인신공격·흑색선전(19.4%)이 다음으로 문제된다(김혜숙, 1994, 이 인용한 1992년 자료). 유권자들은 "선거 때면 흔히 있는 일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하나, 대다수가 금품이나 향응이 투표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유권자나 친지들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 받으며, 또 돈을 안쓰면 "성의없는 의원"으로 찍혀 낙선하기 쉽다고 말한다(김혜숙, 1994, p.83). 뇌물이 주는 편, 받는 편 모두에게 "인사·성의로 포장되어 정당화" (p.84)되는 것이다. 부패한 정치의식은 이렇게 유권자와 후보자의 행동의 문제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주기 때문에 받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기대, 요구하기 때문에 준다는 이 순환성은 부패구조를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의 기본특징이 "단절 (rupture)보다는 연속성 (continuity)"(임혁백, 1992, p.379)인 것은 이렇게 쳇바퀴 속에서 돌고 도는 행동구조, 부패구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교육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강요, 교사에게 촌지 제공, 학교에 다양한 명목의 기부금 제공, 과외,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 지출 등을 학부모들은 그릇된 관행인줄 알면서도 따라간다(한성열, 1994). 학부모들의 사정은 이렇다.

첫째, 남이 다 하니 나도 한다.

둘째, 남이 하는 것과 다르게 하면 자녀가 피해를 받을까봐 불안하다.

셋째, 나의 자식을 남과 다르게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한성열, 1994, pp.123-124).

정치와 교육에서 “남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남과 다르게 하면 불안하다”는 경향은 김혜숙과 한성열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연결될지 모른다. 실제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에 걸쳐 사회활동의 문화차이의 가장 중요한 차원”(Triandis, 1990, p.42)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상에서의 비교문화 연구들에서 한국은 가장 집단주의적인 나라라고 밝혀져 왔다. 개인주의 문화들에서는 사회행동이 주로 개인의 목표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가족, 일집단, 종족, 나라 등의 집단들의 목표에 의해 대체로 결정된다 (Triandis, 1990, p.42)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다 하니까” “남과 다르게 하면 불안해서”로 그치지 않고 “남과 다르게 차별화”하려고 한다. 즉, 남은 다 떨어져도 나는 혹은 내 자식은 붙어야 하며,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앞질러가야 하는 것이다.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들이 이러한 사태를 표현해 준다. 집단주의건 가족/집단 이기주의건 개인주의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인의 국민성일까? 국민성이 못나서 혹은 못돼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대입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며, 정치 개혁법이 선거풍토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일까?

2. 한국인의 국민성

국민성 (national character)이란 한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최빈형 (mode)이라는 의미에서의 대표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차재호, 1994b, p.119). 우리는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일이 안될 때, 상황요인만으로 일을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때 “한국 사람은 왜”라고 짜증스럽게 물으면서 ‘국민성’을 문제삼는다. 차재호 (1994b, p.154)가 서술하는 바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1년에 ‘국민성 활성화’ 문제

를 다루게 된 정황도 그러한 ‘위기위식’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성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이 대체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성 논의에서 초점은 주로 부정적 특성에 맞추어지게 된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3년에 펴낸 「한국인의 윤리관」에서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서술한 한국인의 국민성도 대부분 부정적인 특성들이었다 (차재호, 1994b, p.123의 요약 참조). 그 중 가장 많은 학자-3인 이상-가 지적했다고 하는 특성들은 ‘체면을 차린다’, ‘파벌을 만든다’, ‘폐쇄적, 배타적이다’, ‘눈치를 보거나 이중성 (거짓말)을 보인다’의 네가지였다.

차재호는 객관적 관찰자료에 입각한 한국적 성격 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구한말 이후 해방후까지 한국에서 일정기간 살았던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묘사해 놓은 기록들을 내용분석하였다 (1980년에 발표된 글을 차재호, 1994b가 인용함). 그는 우리 국민의 행동, 신념과 태도, 가치가 지난 10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데 (p.125f), 외국인 (모두 22명)을 대리관찰자로 사용하여 발견했다고 할 수 있는 이 특성들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열거한 한국인 특성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흥미있는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돈, 권세, 명예, 본능 등 사욕에 초연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리는 한국학자들이 있는 데 비해, 외국인 관찰에서는 돈, 부, 권력, 명예 등이 한국인의 중요한 가치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관찰하고, 외국인들은 ‘행동’을 관찰한 것일 수 있다. 한국인의 친절함이나 인정 깊음도 외국인 관찰자들만 지적한 사항들이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대부분 부정적 특성들을 지적했거니와, 외국인들이 관찰한 행동, 신념/태도, 가치 특성들중에도 긍정적인 것들은 정겨움, 높은 교육열, 경로사상, 예의 정도였다 (차재호, 1994b, pp.169-170).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한국인의 성격특징들은 상당수가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서술되는 특성들을 나타낸다. 비교문화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동·서양문화를 구분지어 주는 중요한 차원이 되는데, 문화가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나 하는

데 따라 그 성원들이 '나'와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라진다. 서양문화권에서 '나'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독립적 향상체이고, 자존, 자립, 자기주장, 자기실현 등이 생활의 목표 내지 이상이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집단이나 자연에서 분리된 '나'는 없고, 개인은 내집단에 종속되며 忠, 孝, 義, 信 등의 의무들을 진다 (한규석, 1991, p.3). 달리 표현하면, '나'개념이 서양에서는 '독립적 자기', '독특한 자기-납과 구별되는 자기'인데 비해, 동양에서는 '상호 의존적 자기', '타인과 연결된 자기'인 것이다 (한규석, 1991, p.5). 이러한 자기개념의 차이는 '우리'개념의 차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가족과 친척, 동향사람, 동창 등이 '뿌리', 즉 內集團을 구성하며, 따라서 개인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싫건 좋건 특정한 내집단의 성원이 되고 그 관계는 거의 영속적이며 영향력 또한 제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을 빼면 '우리'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 내집단의 수도 집단주의 문화에서보다 많거니와, 마음대로 가입 탈퇴가 되므로 집단의 구속력도 약하다 (한규석, 1991, pp.5-6).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서구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성장, 발전하고 경제성장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은 물론 우연이 아니다. 자립, 독립을 중시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동시에 개인의 성취와 경쟁도 강조하기 때문이다 (Spence, 1985).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가 곧 경제적 후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이것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보여주었다. 개인주의가 가족유대 파괴와 신체·정신 건강문제들, 높은 범죄율 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Triandis, 1990) 근래에 들어 일윤리까지 쇠퇴한 현실에 직면하여 서구 사회에서는 일본의 길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기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 경제주간지 *Economist* (1994.7.9)는 특집 「일본조사: 동양의 르네상스」에서 일본에는 서구와 달리 지성적 혁명보다 산업혁명이 빨리 왔을 뿐이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양식이 크게 변하고 있고 지체된 사고혁명, 즉 개인주의도 뒤따라 온다고 장담하였다.

개인의 성격이 상당부분 어릴 때의 생활경험에 의

해 결정되듯이, 한 국민의 성격도 그 국민의 과거의 집단적 (collective) 경험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한국인의 국민성에 지난 100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오는 것이 있다면, 그 동안 이어져 온 사회구조와 문화적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차재호, 1994b, p.123). 차재호는 현재에 작용하는 영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교와 조선조 후기의 정치행태라는 과거의 영향만으로 현재의 행동이나 성격이 상당부분 설명된다고 본다 (p.129f.). 유교는 통제에 대한 관심 (修己治人), 질서와 안정에 대한 관심 (克己復禮),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 타인의 선 (善)의 강조, 친애감정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에의 치중으로 한국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선조 후기의 정치에서 세도간의 암투, 무궤도한 인사, 상하급 관리의 가렴주구가 외침과 민생불안과 겹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태도, 가치 등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차재호가 수집한 국민성자료는 구한말부터 1970년까지의 시대범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였고, 오늘의 국민성이 유교와 조선조 정치행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경제성장 경험이 새로운 행동이나 신념, 태도, 가치를 창조하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기존의 성격특성들의 재배치를 가져오기는 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경제성장, 문화적 복합도 증가로 인하여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로 바뀌지는 않았지만—그러려면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집단주의의 색조 (tone)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차재호 (1994b)는 지나치게 타인의 선 (善)을 강조하고 개인의 선을 등한시해 온 것이 많은 병폐를 가져왔으므로, "개인의 선을 개인주의에 흐르게 하지 않고 복원시키는 것이 국민성 활성화의 한 기본적인 방향" (p.153)이라고 본다.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 옮겨가자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가족제도는 이미 무너졌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해 가고 있다”(한성열, 1993, p.54)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이러한 ‘개인주의화’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원래 ‘타인의 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는 아니었다. 지배층이 ‘타인의 선’, 즉 그들 자신의 선을 강조 내지 강요한 것이었고, 외국인들이 관찰한 것처럼 대중은 ‘개인의 선’을, 즉 돈, 권력, 명예 등을 중시해 왔다. 우리가 ‘나’를 죽였다면 그것은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안, 내 봉당 등 내집단, 즉 ‘우리’를 위해서였다. 결국 추구된 것은 ‘우리’의 이익이었고-‘나’는 곧 ‘우리’였으므로-‘나’의 이익이었다.³⁾ 오늘날 내집단 조화, 공동체감, 상부상조라는 긍정적 의미의 집단의식은 사라지는 대신, 가족/집단 이기주의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부정적 의미의 집단의식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폐쇄적 집단주의를 연고주의-또는 ‘끼리끼리’ 문화 (강준만, 1994)-라고 부를 수 있다.

연고주의란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결고리를 기초로 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 및 행동양식의 한 유형”(이종한, 1994, p.2)을 말한다. ‘연’들은 파벌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권력을 얻고 돈을 벌려면 영향력 있는 파벌에 속해야 한다. 현대사회연구소가 1993년에 행정공무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 (83.2%)가 자신의 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 ‘연고의 유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종한, 1994, p.2에서 인용). 앞에서 논의한 교육, 정치 문제들은

출세를 돕는 연고를 얻고 힘센 파벌에 들어가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영향력 있는 파벌에 들어가면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맺고 서로 특혜를 주는 등 서로 연결하고 보호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세력층에 머물 수가 있다 (이종한, 1994).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주의 성향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범위가 극한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고 보인다. 이 점이 우리와 일본의 집단주의의 차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인에게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었고,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도 우리에게서 상대적으로 孝가 더 중요했다 (이종한, 1994, p.8). “일본인의 집단귀속 의식은 혈연, 지연을 통한 소속감 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이익집단에 대한 귀속의식까지도 포함한다” (최상진, 1993, p.232).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모두 아는 조그만 마을에서 살고 있지 않고 도시화, 산업화된 대중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다수가 좁은 지역에 익명적 존재로 몰려 살수록 그 사회적, 공간적 생활환경을 편안한 곳으로 유지하려면 ‘시민정신’, ‘공동체감’ (홍숙기, 1994)이 필요해 진다. 시민정신, 공동체감이란 집단주의의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의 범위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사는 동네, 도시, 나라의 사람들을 포괄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국제화되는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 전인류까지 포괄해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커다란 사회문제들이 나의 이익, 내 직계 가족, 내 파벌의 이익만 추구하려 하는 좁은 ‘우리’의식에서 비롯된다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 그 목표는 공동체감을 키우는 일이

2)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urbanism as a way of life)이라는, 도시생활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생각해 보라(L. Winth가 1936년에 말한 이 개념을 이시재, 1992, p.445에서 재인용). 도시성의 중심내용인즉, “가족의 사회적 의의 감소, 친족유대의 약화, 근린유대의 결여, 사회적 연대의 전통적인 기반의 붕괴, 산업적·교육적·오락적 활동의 전문적 제도의 이행, 신분제도의 붕괴, 소독이나 지위집단의 분화, 자발적인 집단의 속출, 경쟁과 공격 불체기구의 발달, 비인격적, 피상적, 일시적, 익명적, 궤변적, 합리적, 공리적, 금전적인 제2차 접촉, 간접적인 통신·전달과 이해집단 형성, 유동적인 대중의 형성” 등이다(이시재, 1992, p.445, 각주 2).

3) 이종한(1992)은 집단주의적인 한국인들이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으리라는 가설을 3,4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에서 한 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내집단 별로 보면, 두 나라 모두에서 직계가족, 친구, 가까운 친구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제일 높았으나, 직계가족과 친구에 대한 공동체감은 한국남자보다 미국 남자에게서 더 높았다. 반면, 먼친척, 동창회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한국에서 훨씬 높았다.

4) “언론은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가 문제라고 떠들어대지만, 아무나 ‘한탕’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한탕’을 하려면 ‘부정부패의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다. 정보도 빼내고 뇌물도 바치고, 그것도 아니면 배타적인 인맥과 학맥이라도 있어야 한다”(강준만, 1994, p.42).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공간·사회 환경을 편안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 안정감을 키우면 된다 (홍숙기, 1994). 즉,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총체적 무질서를 없애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의 '의식개혁'으로 가능할까? '국민성'을 개조하면 될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문제는 국민의 의식, 성격이라기보다는 대다수의 행동과 환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의식개혁의 문제는 실상 어떻게 국민의 행동과 환경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된다.

3. 개혁을 위한 제안들

사람의 행동과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에 대한 의견은 무수히 많으나, 이 글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방안 두 가지를 차례로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차재호가 「문화설계의 심리학」 (1994b)에서 제안한 국민 행동변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미래연구학회의 정치학자, 사회학자, 교육학자 등의 「현대 민주시민 교육론」 (전득주 외, 1992)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문화설계 : 환경변화에 의한 행동통제

차재호 (1994b)는 의식을 행동의 원인으로 상정하는 상식이 오류라고 비판한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사회문제란 결국 국민의 행동의 문제이며, 의식 또한 행동의 문제이다. 예컨대, 질서의식이 없어서 문제라고 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질서를 안 지키는 구체적 행동들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식이 아니라 행동을 직접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문화설계 또는 사회실험의 작업이 된다 (p.192).

차재호는 작동적 조건형성 원리를 사용하여 국민의 광범한 행동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개혁대상 행동을 부패구조와 관계가 없는 행동 (예, 새치기)과 부패구조에 지배되는 행동 (예, 촌지 주고 받기)으로 나누면서 (pp.212-213) 그는 전자의 범주의 행동을 주로 다룬다. 그는 대전 에스포에서의 질서지키기를 주

로 예를 들어서 상황조작을 통한 행동통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일반적 전략을 서술하였다 (p.214ff).

차재호는 "행동통제를 통한 의식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조치"로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이를 실시할 적극적인 용의가 있어야 하며 행동통제의 일반적 전략과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p.225). 그 예비조치는 누가 하는가? 즉, 누가 관공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가? 문화실제작업은 이 "예비조치"에서 벽에 부딪힌다. 환경을 재구성하여 국민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 방안이 성공하려면 담당부서 사람들의 "적극적 용의"와 "전략이해"가, 즉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심리학자, 사회학자, 행정학자, 정신의학자 등 전문가들이 이 사회실험에 행정실무자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p.193) 주장하는 그는 이 전문가들이 행정실무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⁵⁾

질서지키기 같은 '부패구조와 관계없는' 행동들의 통제에서 이미 행정당국의 이해와 지원이 문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훨씬 더 큰 해결과제인 '부패척결'에서는 어떻겠는가? 특히 이 문제에서는 갖가지 구호와 표어와 '단호한 의지 표명'들만 난무한다. 차재호는 행정당국이 의식개혁만 떠들어대는 이유가 그들이 전시효과만 노릴 뿐 진정한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p.269). 한편 정부가 직접적 행동통제를 기피하는 것은 국민의 취향과 맞아 떨어진다. 시민들은 "교통신서가 문란하면 계몽을 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좋고, 엄격한 단속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나쁘다" (p.289)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켜야지 타율적으로

5) "사회실험은 어느 경우나 정부의 정상적 행정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그 실천결과를 정부의 정부시책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천과정에서 오는 저항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여, 실천 단계에서, 그리고 실험 결과의 적용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차재호, 1994b, p.194). 과학자,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식개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양편의 관계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우리[사회과학자]와 권력자와의 관계는 단지 권력자들이 우리를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력자들의 문제와 의도를 인정하는 기술자가 되거나 혹은 권력자들의 특권과 권위를 고양하는 이데올로기 주의자들이 되는 것이다(Mills, 1975/92, p.227)".

지키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단속은 예방위주가 되어야지 처벌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p.290). 관리들이 진정한 변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식개혁만 떠드는 것처럼, 시민들도 단속이 당장 긴장과 불편을 주니까 그것보다는 계몽, 교육 등 효과없는 방법이 낫다고 강변하는 것일까? 어쨌든, 한쪽에는 행동통제를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국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철저한 행동통제의 용의도 없고 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당국이 있다.

정부의—그리고 국민의—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문화설계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게 세워져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부패구조와 관련없는 행동들을 고치는 일도 그렇지만, 부패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행정당국의 의지와 노력없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누가 어떻게 정부로 하여금 교통문화, 교육문화, 정치문화 등을 새롭게 설계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바로 정치의 민주화를 누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엄청난 과제가 된다.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이 정치의 부패와 부조리에 있듯이, 그 해결 또한 정치의 민주화에 있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와 내용이 작업장, 학교, 교회, 가정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임혁백, 1992, p.379) 과거와 단절하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확대하려면 방법은 ‘민주시민 교육’ 밖에 없을지 모른다.

2) 민주시민 교육

전득주 외 (1992)는 미국, 독일, 일본의 민주정치체제와 민주시민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한국의 실태와 비교하였다. 세 나라 민주정치체제는 다음 여섯 가지 점에서 우리의 체제와 다르다고 평가되었다 (pp. 254-265).

첫째, 건국 초기 통치엘리트의 의지와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역사적결도 이 의지와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초기의 통치엘리트는 각양각색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으나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서로 주도권 다툼에 빠져 들었고 역사적결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세 나라는 초기에 성립된 헌법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계승하

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부분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왔다. 한국의 헌법은 부분개정을 포함하여 9차례나 개정될 만큼 “기구”하였고, 이는 국가 기본질서의 원칙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안정성보다 더 큰 문제로, 헌법개정의 대부분에서 특정 정파나 세력의 자의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헌법에는 안전성과 정통성이 모두 부족했다.

셋째, 그들의 정치·사회 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에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역사의 오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복되는 헌정중단, 권위주의 정치, 기본권 침해 등과 같은 역사적 오류를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넷째, 헌법과 법률, 그 밖의 여러가지 장치를 통하여 마련된 제도가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능력과 태도가 민주적이다. 세 나라 국민들은 주권의식이 강하고, 국민 각자의 이익과 의사를 보호해 주지 않는 정치권력은 물러나게 하였다.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태도중의 하나는公私를 구분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 세 나라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선진 세 나라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체제 발전 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되는 우리의 ‘국민성’이 드러난다. 가장 분명한 특성은 “국민의 능력과 태도”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 성향이다. 사적인 ‘우리’ 집단의 이익을 챙기느라 공적인 조직체의 질서가 흔들리며, 남이 내집단 우선으로 일을 처리해도 너그러운 것이다. 또 하나 분명히 비교되는 특성은 “과거 역사의 오류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서 드러난다. 세 나라는 불행한 역사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고쳐나갔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였다. 경험을 통하여 배운다는 것은 결국 강화조건에 따라 행동을 고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민이 한 번 과속을 해서 딱지를 떼고 다시는 과속을 안한다든지, 많은 운전자가

과속을 하므로 행정당국이 단속을 엄하게 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행동의 후속결과에 따라 그 행동을 고치는, 즉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된다. 앞에서 교통질서 지키기와 관련하여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동의 직접적 결과 - 특히 부정적 결과 - 를 경험하기 싫어하고, 말로 계몽, 교육당하는 편을 좋아한다. 국민과 행정당국 양편이 모두 그렇다.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고 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의 사회문제는 없어지기는 커녕 새 문제들만 추가될 뿐이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첫단추를 제대로 끼웠을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또한 선진적으로 실시한 듯하다 (전득주 외, 1992, pp.267-276).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의 민주시민 교육은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충실하되 각국의 전통과 시대상황에 적합한 시민적 행동을 목표로 하였으며,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을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의 기본적 규범을 목표로 강조하고, 국가적인 원로와 상징을 보호 또는 존중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익인간'의 이념을 목표로 인간존엄, 자유, 평등 등 민주적 가치, 태도를 가르쳤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실천적 행위의 습득보다는 이념에 대한 선언적인 수준의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중시되고, "반공 이데올로기 및 전통문화, 민주적인 가치의 태도를 혼동하도록 가르쳐왔다" (p.281). 또 국민주권, 국민의 능동적 정치 참여보다는 지도자의 역할, 민족화합을 더 중시하는 가 하면, 선거만이 정당한 정치참여이고 집회와 결사, 사회운동 등은 사회혼란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의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 방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우선 외적 환경으로서, 전득주 외 (1992)는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으면 민주시민 교육의 상당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권의 획득과 행사가 민주적인 원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게 체험으로 습득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도 비민주적 또는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창출되거나 행사되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안겨 주기도 하고, 심리적 좌절과 불만을 상승시켜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시민 교육을 중요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시민 교육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정치적 권위를 강화시켜 주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pp. 277-278).

정치·사회적 제도가 민주적 원리에 적합하도록 운영되고, 통치엘리트의 민주적 실천과 국민들의 참여 능력 (비판과 감시 등)이 있어야 하며, 민주적 원리를 우선시하는 사회풍토가 있어야 한다는 나머지의 시사점들 (pp.278-280)은 정치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이 외적 환경의 요인들이라 한다면, 내적 환경의 요인들로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명료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 추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교육의 방식이 민주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pp.281-283). 민주적 교육방식에 관하여 이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추천한다.

특히 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에서는 학생자치회의 조직과 활동의 자율성 신장, 각종 학교 행사의 교사 학생간 공동기획과 추진, 학교업무의 학생평가 기회 부여, 학급의 운영과 관리의 자율화 등도 과감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해관계와 입장이 대립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지역 사회 인사들과의 면담이나 의사 결정과정, 집행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의 풍토로 보면, 통치권자 또는 사회지도층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시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의식개혁이며, 작게는 학교교장과 교사의 민주적 의식의 함양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와 같은 작업은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관이 마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p. 283).

초·중·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 비리가 넘치는 (한성열, 1994, p.122의 표 참조) 현실에서, 학생자치회가 조직된다 해도 그것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학교행사'가 기획, 추진될 수 있고, 학교업무들 학생에게 공개할 수 있을까? 즉, 교육의 '외부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부환경'이 변할 수 있을까?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한 미래연구학회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 통치권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학교교장과 교사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고 말았다. 민주시민 교육 전담기관이 마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들 지도층과 교육자에 대한 의식개혁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교육전문가가 국민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이 정부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전문가를 교육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차재호 (1994b)는 국민성확성화의 방안으로서 일반시민에게 정부나 공공기관을 역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고, 관청은 시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고맙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pp.179-182)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선선히 국민에게 역통제 권력을 주지는 않으며, 권위적이고 부패한 정부일수록 그것을 더 기피한다. 역통제 권력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관청이 시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고마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관청으로 하여금 시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러려면 시민이 실제로 만만하지 않고 무서워져야 한다. 무서워지려면 힘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하고, 힘을 과시하려면 의식 있는 여러 시민이 모여야 한다. 즉,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4. 시민운동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크고 작은 사건들이 폭격처럼 터져서 '비뚤어진 세상, 무너지는 사회'에 대해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면,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시민운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운동, 노동운동 같

은 전통적인 정치적 사회운동과 대비하여 환경운동, 여성운동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인 시민운동을 신사회운동 (new social mov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사회운동은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계급경계를 넘어서 문제-가부장제 (여성운동), 인종주의 (흑인운동), 산업주의 (생태운동) 등-를 정의한다 (Scott, 1990/94, p.40f).

이시재 (1992)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운동이 활발해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도시적인 생활양식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또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집합적 행위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정치 효능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지방행정이 밀실에서 행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관·민에게 인식되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제성장, 민주화보다는 삶의 질 자체가 중요해 진 것도 정치에는 무관심해지면서 사회운동은 활발해진 배경이 되었다. 신사회운동을 특징짓는 말로 Scott (1990/94, p.25)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정의가 아니라, 주관적인 개인의 행복과 '홀륭한 삶'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물론 Scott의 이어지는 말처럼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정의없이 '홀륭한 삶'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명백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신사회운동에서는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정의를 "생활 최우선주의" (이시재, 1992, p.463)로, 직접민주주의로 이루고자 한다.

Scott (1990/94)는 사회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운동이란, 자신들이 공통의 이해관심을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삶의 적어도 일부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이다. 사회운동은 정당이나 압력단체와 같은 여타의 집합적 행위자들과는 구별되는데, 사회운동이 대중동원 또는 동원의 위협을 그것의 사회적 제재의, 따라서 권력의 가장 중요한 근원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아가 사회운동은 자발적 결사체나 클럽과 같은 여타의 집합체들과 구별되는데, 사회를 방어하거나 변동시키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혹은 사회안에서의 집단의 상대적 위치라는 점에서 그러하

다 (p.17).

저자는 공동의 이해관심과 정체-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여성, 대한민국 국민 등-에서 출발하여 대중동원 내지는 동원의 위협을 사회적 제재의 근원으로 삼는 집합적 행위 (collective action)가 결국 우리 사회를 지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집합적 행위의 기본은 대중동원 내지는 동원의 위협이 되는데, 시민이 모여 공동의 이해관심을 추구할 때 그것이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까지 가지려면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기업의 행동을 비판·감시하는 일과 더불어 시민들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비판·반성하는 일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1) 지도층 행동의 통제

개혁은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할 줄 아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차재호, 1994b). 부패한 정치인, 사업가, 공무원들은 '법대로' 행동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동기가 없을 뿐이다. 그러한 동기는 그들 내부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무슨 결의대회에서의 엄숙한 선서나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표명도-'복지부동'은 가져올지언정-그러한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법을 어기고 악용하는 것이 권력과 돈을 보장해 주는 한, 어쩌다 위법행동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복권'되어 다시 권력의 자리로 확실히 돌아오는 한, 그들이 법을 지키는 쪽으로 행동을 바꾸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언론이 이 권력파벌에 같이 속하여 정보독점에도 상부상조하기 때문에 권력 엘리트들이 서로 봐주고 지켜주는 파벌주의는 국민에게 좀처럼 노출되지 않는다. 시민운동의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서라도 '지도층', 행정당국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 비판하는 일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세계개혁 등 법이나 제도의 개혁도 시민모임들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안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모른다가보다는 옳은 길을 갈 의지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치인

과 행정당국의 문제인 것 같다.

「한겨레신문」(1994.9.29)은 "국회의원들이 달라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준비활동에 대해 보도하였다. "국감의 전 초전격인 각 상임위에서도 의원들의 출석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변화에 대해 이 신문은 "최근들어 민간단체 등에서 의정활동을 분석한 의원성적표를 발표하는 등 의정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자극제가 됐다는 후문"이라고 썼다. 물론 95년의 4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도 자극제가 되었겠지만 그 또한 결국은 '국민의 반응'을 의식한 것이고, 민간단체의 의정감시활동이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운동이 활발해진 즈음에 이러한 예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91년 자치단체의원 선거 때 발족되어 14대 총선과 대선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한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의 성공이 하나의 예가 된다. 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환경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사업계획들을 주민, 시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투쟁의 힘으로 철회시킨 것도 지도층 행동의 통제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도완, 1994 참조).

행정당국이나 기업들의 정책결정이나 행동들에 대해 시민 편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정책들의 구현에 결과적으로 정적강화로 작용하였다.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의 사업계획을 주민 또는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강화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권력 엘리트들에게 지금까지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매우 불편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시책이나 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시민이 반응을 보일 때 이를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언론은 바로 이러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시작해 있는 듯하다 (이시재, 1992 ; 한완상, 1992).

전통적으로 우리의 위정자들은 국민의 능동적 참여보다는 지도자의 역할, 민족화합을 더 중시하고,

집회와 결사, 사회운동 등은 사회혼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역설해 왔다 (전득주 외, 1992, p.281). 실천적 행위보다 “선언적인 수준의 지식과 정보” (p.281)가 강조되어 온 공민교육의 결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능동적인 정치참여 경험이 절대 부족하여 ‘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집단주의가 이기적 집단주의로 변색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지역에게, 자기가 속하는 계층 혹은 직업 집단에게 올 피해에 저항하고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국민의식’이 생겼다는 자체는 “... 국가권력과 그 자율성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었다는 사실, 시민사회의 저항능력을 적어도 잠재적으로 키워주었다는 사실” (한완상, 1992, p.17)을 확인시켜 준다.

저자는 최근의 책 (홍숙기, 1994)에서 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증진시키려면 안녕감을 높여야 하며, 안녕감은 객관적 (공간·사회)환경의 질에 좌우될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도 직접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녕감은 이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한 ‘집’이라는 의식이며, 화려하든 초라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은 감옥이지 집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삶에 별로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안하고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당국의 행위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살아가는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안녕감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것 또한 안녕감을 높이는 것이다.

안녕감은 공동체감 발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홍숙기, 1994). 스스로 편안하고 행복해야 ‘나’의 이익과 권력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범위가 내 이웃으로, 내 후손으로, 나아가 인류로 넓어지는 것이다. 안녕감을 높이려면 우리가 사는 공간·사회 환경

을 더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순환성이 있다. 사는 환경이 편안하고 공정해서 우리 스스로 안녕해야 ‘나’를 초월할 수 있지만, 넓은 ‘우리’ 집단 속에서 행동을 같이 해야 세상을 더 안녕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순환성을 깨뜨리려면, 즉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내집단 울타리를 벗어나 공동체로 나오려면, ‘깨달음’이 필요하다. 즉, 나와 내 식구의 안녕과 행복이 내 집안에서 시작되고 끝날 수가 없고 더 넓은 공간·사회환경의 상태와, 그리고 나와 직접 관계없는 사람들의 안녕,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 계몽의 커다란 부분은 우리의 불행에, 우리 사회의 위기에 우리 자신이 기여한 몫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헌법이 특정한 정파나 세력에 의해 개정되고 그나마 개정된 헌법마저 마구 무시되어 온 현대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권력과 돈을 손에 쥔 계층만 법과 질서를 계속 무시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법과 질서를 소홀히 알게 되었다. 또한, 선거후보자들이 돈을 뿌리니까 받고 또 유권자가 요구하니까 후보자가 돈을 뿌리는 예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행동은 부패구조를 영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층의 행동과 국민의 의식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성을 깨뜨리려면, 지도층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동시에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고쳐나가야 한다.

2) 국민의 의식계몽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 무질서 등을 드러내 주는 대형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는-일반 국민뿐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도-‘지도층이 문제’라는 결론을 쉽게 내린다. ‘정치하는 놈들’, ‘부유층’이 썩었으니까 모든 것이 썩었다는 분석은 결국 ‘남들’이 문제이지 ‘나’는 멀쩡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예에서 보았듯이, 요구하는 편이 있으니까 주는 편도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도-꼭 당선한 사람에게서는

아니라 해도-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선거운동으로 당선한 후보자들의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행위가 선거부정을 영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정치의 부패와 부조리가 선거부정으로 나타난다면, 또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인 교육문제는 대학입시 제도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경쟁이 점점 심해져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조차 과외열풍이 일 정도로 학교교육이 마비되고 어린이들의 심신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학부모들은 무능한 행정당국, 특히 교육부를 비난하지만, 다른 한편 자녀를 닦달하고 교사에게 촌지를 갖다 바치면서 제도에 순응만 한다. “남이 다 하니까 나도”, “나의 자식은 남들과 다르게” 라는 학부모들의 동기가 변하지 않는 한 교육부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경쟁은 심해지지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기비판과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 무질서에 대해 개탄할 때 시민들 자신이 그러한 총체적 부패와 총체적 무질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 부유층만 달라지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믿으면서 지금의 구조에 순응만 하면, 즉 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남이 다 받으니까” 계속 받고, 역시 “남이 다 하니까” 자녀를 과외공부 시키고 교사에게 촌지를 갖다주면,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몫의 책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몇 년 전에 유행한 것처럼 ‘내 탓이오’라는 표어를 붙이고 다니는 일로 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활에서 직접 경험해야 한다. 시민운동중에서 환경운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상당부분 시민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생겨나고 나빠진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은 지구적인 차원으로, 행동은 지역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는 ‘나’와 세계, 내 지역과 전체 지구가 서로 떼어 수 없는 상호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시재, 1992).

환경교육이란 사실 “우리 스스로가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중관련성” (이시재, 1992, p.448)을 계몽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정치, 교육 문제에 대한 시민교육도 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부조리가 생기고 안 없어지는 데는 지도층의 부패와 제도의 불합리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부패와 비리도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계몽해야 하는 것이다. 김혜숙 (1994)은 “올바른 정치문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교육이 혼계성의 일반적 구호에 그치면 안되고, “금품·향응 선거의 비싼 댓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점, ‘뇌물·매수’를 ‘인사·성의’로 착각하는 우리의 인식 경향과 그러한 의식의 부당성” (p.92)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민계몽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다. 입시 교육제도가 어떻게 우리나라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심신을 파괴하고 있으며, 왜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경쟁은 계속 심해지기만 하는지, 학부모들의 행동이 그 제도의 잘못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식개혁의 문제는 결국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조성하는 문제인데, 동기형성에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따라오는 결과 (강화)를 분명히 부각시키는 일이다. 지도층 행동의 통제에서 부정적 결과-국민의 비판과 감시-가 중요하다면, 국민의 행동의 변화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타인의 선’, ‘공동선’ 자체보다는 ‘개인의 선’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행동변화의 동기도 생기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이나 사업에 저항하고 개인적으로도 일회용품을 안쓰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일이다. 정치와 교육의 부정과 비리에 저항하고 스스로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도 ‘나라’를 위하는 일이면서 결국은 나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는 일인 것이다.

개인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선’을

위해 '타인의 선', '사회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학적 상상력' (Mills, 1975/92)은 우리 민족성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집단주의의 색조도 변경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집단주의는 폐쇄적, 배타적이고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출세의 발판이 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팔자 닷'을 하며 체념하지 않고 그들의 좌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특징인이나 특정 계층의 억압이 아니라 '구조'가 좌절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분노는 '세상'을, 즉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 '지존과 사건'은 과시할 만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젊은이들이 '있는 자'에 대한 맹목적 분노를 터뜨린 사건이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 우등생이라는 선택 받은 소수에 끼지 못하는 다수의 아이들은 그 모범생들에 대한, 부모와 교사에 대한, 학교와 세상에 대한 분노를 키워가고, 그 중 소수는 '비행소년'이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교가 무서운 곳이 되게 만드나.

'타인의 선'이 없이는 '개인의 선'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집단주의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할 것이 된다. 다만 우리의 집단주의에서 그 폐쇄성, 배타성을, 우리의 이기주의에서 그 근시성, 상상력부족을 극복하면 된다. 소외된 사람들의 맹목적 파괴행위는 꼭 살인같은 대형 범죄로 나타나지 않고 소소한 괴롭힘이나 사기, 공공기물 파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짐승', '한심한 인간'으로 욕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폐쇄적 집단주의, 연고주의가 다수를 좌절시키고, 내 아이가 교사의 호의적인 주목을 받을 때 무시당하는 다수가 좌절된다는, 내가 타인의 불행에 가해자로서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비판과 책임을 추궁할 때 문제해결이 시작된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며, 그것은 기존행동에서 얻는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식계몽은 문제행동이 가져다주는 당장의 이익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이후의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펼쳐보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각자'가 나서서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시민운동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시민들이 만나고 모여서 생활의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민운동의 출발이다. 그러한 나눔을 통하여 이 사회구조가 우리들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이 구조를 강화, 유지시키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의사소통적 행동에 기반을 둔 참교육" (최병두, 1991, p.167)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참교육'을 가져올 잠재력이 가장 큰 시민운동은 환경운동인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 시민운동 중에서도 환경운동이 가장 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⁶⁾ 이는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은 우리에게 정부와 기업에 대한 투쟁 만큼이나 시민 자신의 행동변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나아가, 환경파괴가 궁극적으로는 계층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공동선'이 없이는 '개인의 선'도 없다는 절대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운동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적인 사회운동" (구도완, 1994, p.258)인 것이다.

환경운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안녕감과 공동체감을 키워줄 수 있다. 우선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스스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통제감이 우리의 안녕감을 지켜준다. 아울러, 환경은 우리 모두의 환경이지 '나의 환경'과 '남들의 환경'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인식, 공동의 이해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합쳐야 문제해결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직접·간접)경험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동체감을 키워줄 수 있다.

3) 환경운동과 공동체적 삶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시민운동이 발전하면서 환

6) 구도완(1994)의 조사에 의하면, 91년과 92년에만 각각 19개, 18개의 새로운 환경단체가 생겨났고 (p.114의 표 5-7), 회원수가 천 명을 넘는 단체가 9개가 된다 (p.115의 표 5-8).

경운동도 함께 확산되었거니와 그 유형도 변화를 겪었다 (구도완, 1994). 구도완은 주체 (피해자·시민)와 대상 (국가·기업·시민)이 누구냐에 따라 환경운동을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형 1,2와 4,5를 '지도층 행동의 통제', 유형 3과 6을 '국민의식 계몽'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환경운동은 주로 전자의 범주에 집중해 왔다. 그런 경향 속에서도 피해자운동 (특히 유형 1,2; 예, 온산 주민운동, 구도완의 사례연구 참조)이 중심이 되다가 1988년 이후 환경·시민 운동 단체들이 유형 4,5,6의 운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압력)운동(유형6)은 매우 새로운 운동이며, 피해 운동 중에서도 주민대상 운동(유형3)은 드물게 나타난다 (구도완, 1994).

환경운동은 다음 여러 가지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도완, 1994, p.252f.). 우선 민주화, 인권, 민중생존권 대신에 환경, 생활, 건강(1988 -91년의 '모색기'),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92년 이후의 '확산기')같은 새로운 쟁점을 사회운동에 들여 왔다. 둘째, 경제성장 중심주의가 비판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운동의 주체가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이끌던 대학생, 노동자, 재야 지식인 대신에 피해주민, 주부, 학생, 전문지식인으로 변화를 보였다. 넷째, 운동의 방식과 조직형태도 달라져서, 강한 연대로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시위, 농성, 선전 대신에, 자발적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느슨한 대중조직이 유지되면서 "보다 덜 적대적이고, 보다 유연하면서 현실주의적인

목표들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운동은 이념적으로 보편주의를 지향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집단 이익의 확보나 사회제도의 개선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지만, 환경운동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적 이해관심을 넘어서서 일반이익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은 현세대의 인간들 사이의 형평 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형평,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살고 있는 생태계와 인간 사회 사이의 형평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환경운동은 과거의 어떤 운동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보편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벌이는 정부, 기업에 대한 압력 운동, 그리고 시민들 자신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도 직접적인 자기 이해관심을 넘어서 공공이익,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해관심에 근거한 것이다 (p.254).

이렇게 볼 때, 현재 "확산기"에 있는 환경운동은 - 위에서 시민운동을 정의한 바 - 공통의 이해관심과 정체에서 출발하여 대중동원 내지는 동원의 위협을 사회적 제재의 근원으로 삼는 집단적 행위라는 기준에 매우 잘 들어 맞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나아가 생태계와 인간 사회사이의 공존과 형평의 추구가 우리의 좁은 집단주의를 치유시킬 수 있다. 그러한 보편주의와 공존의식이 '우리'의 범위를 넓혀 주기 때문이다. 뛰어난 아름다운 자연으로 축복받은 땅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민족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원래 우리 땅, 우리 자연에 대한 애착이 '똥줄'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강하다. 따라서 환경보호운동은 '우리' 집단의 범위를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추상적인 '사회'나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숨쉬는 공기, 먹는 물 등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운동권'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의 문제는 물론 환경문제 말고도 많이 있으며, 환경운동에서 키워진 시민들의 자신감 (효능감)과 공동체감은 다른 문

표 1. 환경운동의 유형 (구도완, 1994, p.169, 표6-1)

운동대상 운동주체	국 가	기 업	시 민
피해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운 동	집단지주 요구운동 현오시설 반대운동	피해배상 요구운동 공장입주 반대운동	소각장 주변 주민 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
시민(압력)	(유형 4)	(유형 5)	(유형 6)
운 동	입법요구 운동 정치적 압력운동	분매운동 오염감시 활동	생활환경운동 유 기농 직거래 운동 생명(문화)운동

제들에 대한 대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지적 수준의 많은 개별집단들과 조직들”에서 소소한 생활문제들을 해결하는 독일의 ‘시민주도운동’(Buergerinitiative)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상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의 지역중심성 및 쟁점중심성”, Scott, 1990/94, p.44). 의식의 문제가 결국 행동의 문제인 것처럼, 사회문제란 결국 생활의 문제이다. 행동이 바뀌면서 의식도 바뀌는 것처럼, 생활의 불편함, 불합리함이 하나씩 해소되어 가면서 사회도 점차 정화되어 갈 것이다.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중심적, 쟁점중심적 시민운동이 부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주인의식’과 더불어 ‘인간적 유대’, ‘공동체적 삶’이다 (신용하, 1985, p.11). 물론 시민운동이 문제해결을 져혀두고 “공동체적 ‘유토피아’”로만 물러나서는 안된다 (Scott, 1990/94 p.80). 그러나 경제성장이나 민주화,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정의 자체가 아니라 삶의 질, 행복한 삶이 시민운동의 직접적인 목표라면, 목표성취를 위한 과정 자체가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운동의 최종적인 성공은 풀뿌리 조직과 전문운동 조직의 자원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 (구도완, 1994, p.241). 시민운동의 참여자들은 직접적 자기이해가 결여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를 넘어 ‘미래의 그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시민운동이 성공하기 때문에도 참여가 “공동체적 삶의 따뜻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회문제들이 우리의 폐쇄적, 배타적인 집단주의에서 비롯된다면, 공동체감의 증진이 실상 우리의 사회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운동은 생활의 문제를 주민 또는 시민 스스로가 지도층 행동의 통제를 통하여 그리고 국민의식 각성을 통하여 집합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생활 자체가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효과 말고도, 시민운동의 성공에서 얻어진 사회적, 정치적 효능감이 우리의 안녕감과 공동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효능감, 공동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회문제 내지 생활문제들에도 주민/시민들이 집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역중심적, 쟁점중심적 시민주도 운동은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혁명,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사회의 구조적 변형” (구도완, 1994, p.259)을 가져와 자본주의, 산업주의 사회체계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행동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고 시민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면서 남이 다 하니까 부패와 무질서에 동참하는 구조로부터 역시 남이 다 하니까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데 참여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그리고 그러한 ‘운동’ 참여에서 “공동체적 삶의 따뜻함”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식개혁이며 ‘민족성개조’이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준만 (1994). 빈부격차와 돈세상과 끼리끼리의 문화. 월간 말, 1994년 11월호 40-43.
- 구도완 (1994).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종석 (1994). 기존과의 예비후예. 어둠의 10대들을 찾아서. 월간 말, 1994년 11월호 48-55.
- 김혜숙 (1994).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식과 행동. 한국심리학회편, 일상화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 심리학적 접근.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pp.71-94.
- 신용하 (1985). 서설 : 공동체에 대한 현대인의 추구. 신용하편, 공동체 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pp.11-17.
- 이시재 (1992). 90년대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의 방향.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 한울, pp.441-446.
- 이종한 (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2), 76-83.
- 이종한 (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발표원고.

- 임혁백 (1992). 민주화시대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 국가, 시장,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 한울, pp.379-403.
- 전득주 외 (1992). 현대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평민사.
- 차재호 (1993). 심리적 환경에서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2, 60-80.
- 차재호 (1994a).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한국심리학회편, 일상화된 국민 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심리학적 접근.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pp.3-24.
- 차재호 (1994b).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병두 (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서울: 한길사.
- 최상진 (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 의식 비교. 한국 심리학회 '93연차 학술 대회 학술 발표 논문집.
- 한규석 (1991). 집단주의 - 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0, 1-19.
- 한덕웅 (1994).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편, 일상화된 국민 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 심리학적 접근.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pp.27-68.
- 한성열 (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편, 일상화된 국민 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 심리학적 접근. 1994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pp.121-132.
- 한완상 (1992). 한국에서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pp.9-25.
- 홍숙기 (1994). 일과 사랑의 심리학. 서울: 나남.
- Mills, C. W. (1975/92, 강희경·이해찬 역). 사회학적 상상력. 서울: 기린원.
- Scott, A. (1990/94, 이복수 역). 이데올로기와 신사회 운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 Spence. J. T. (1985) Achievement American style. The rewards and costs of individualism. *American Psychologist*, 40(42), 1285-1295.
- The Economist* (1994. 7. 9). Survey of Japan. Oriental Renaissance.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Berman(ed, pp.41-133).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Cross-cultural perspectives*.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Social Issues and National Character of Korea and Suggestions for Change

Sook-Kee Ho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 social issues of Korea get so serious that they seem to endanger the existence of the society, psychologists who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individuals are showing interest in the study of social issues. Social issues considered important by Korean people involve environment, politics, and school education. As these problems are usually attributed to the Korean "national character", studies of national character were reviewed. Many of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held typically as Korean are associated with collectivism. The trouble of the Korean collectivism seems to lie in its exclusiveness; the "we"-group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non-family members of the greater community. Two of the suggested programs for social reform were discussed: "Psychology of Culture Design"(Cha, 1994b) and "Moder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Chun et al, 1992). Cha maintains that "consciousness change"(cultural reform), which is widely considered as the cure for many social diseases, is in fact behavior modification of people through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operational conditioning. However, this program may not be implemented, as the suggested "preparatory measures", the active support from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are unlikely to be taken. Only a democratic or democratized state would actively set out to attack the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ose originating from political corruption. So principles and method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Chun et al, 1992) were discussed. But here also the authors concluded that the political elite and school staff should be educated to act democratically, before the education program can be successfully enacted by them. It seems that people should guide and educate politicians and educators rather than be guided by them. In other words, civil movement is in order for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s. It was argued that people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should monitor and control the actions of the social and political elite and at the same time engage in self-criticisms to change their own attitude and behavior. As one of the successful examples, the environmental movement was described. The residents/citizens get sense of well-being and control through keeping their environment safe. They also realize that environment concerns everyone and its protection requires collective action, which fosters their sense of community. Such sense of well-being and sense of community may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exclusiveness of the Korean collectivism.